



활짝 핀
셋노란 봄

포근한 날씨를 보인 19일 니주시 영산포 영산강 둔치에 노란 유채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영산강 유채꽃은 4월 초 개화해 4월 중순에 절정을 이루며, 이 곳에서는 22일부터 25일까지 영산포 흥어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적도 아군도 없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 총력전

영남은 한 목소리 호남은 딴 목소리

경남도·한나라·민노 “LH 이전 협력”

광주·전남·전북 과학벨트 공조 안돼

“적도, 아군도 없다.” 최근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지역과 여야를 뛰어넘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을 빗댄 말이다. 영남지역 정치권은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놓고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로 나뉘어 살벌한 ‘경쟁전’을 펼친 바 있다. 그동안 영남이 각종 현안을 두고 나름대로 물 밑 조울을 잘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신공항 유치를 둘러싸고 펼쳐진 대결 구도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유치를 놓고는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의 달빛(달구벌·빛고을) 공조가 눈에 띄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의 국회의원들은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를 요구하는 건의문에 공동 서명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광주·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대구·경북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특정 사안을 놓고 공동 보조를 취한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반면, 우군으로 믿었던 민주당은 과학벨트의 총칭권 유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광주·전남의 분산 배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여기에 같은 호남인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도 광주·전남의 과학벨트 유치 움직임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군산공항 국제선 문제 등 일부 현안을 놓고 광주·전남과 전북이 미묘한 갈등 양상을 빚은 탓으로 풀이된다. LH 공사의 경남 진주 혁신도시 유치를 놓고도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김두관 경남지사가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으로 그동안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고

수하며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김두관 경남지사는 18일 서울에서 경남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LH 공사의 진주 혁신도시 일괄 이전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 특히, 이 자리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경남 창원시)도 참석, LH 공사 일괄이전의 당위성에 공감을 나타내며 조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치권이 여야와 지역을 뛰어넘어 공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사안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점도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믿을 것은 ‘지역 민심’ 밖에 없다는 절박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총선 공천 방식이 당 지도부가 밀실에서 결정하는 ‘하향식’보다는 지역민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선을 통해 ‘상향식’으로 이뤄질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공천 방식이 상향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믿을 것은 지역민심 밖에 없다는 인식

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 현안과 관련,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여야와 지역을 뛰어넘는 공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대강 지류사업 지방재정 파탄 부른다” 조영택 의원

정부가 4대강 지류·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경우 지방정부에 수조원의 재정부담을 가져와 지방재정에 파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은 지방정부 예산에 40% 정도

를 부담하게 돼 지방정부가 6~7조원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비 폭탄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가하천은 정부가 애초 지방정부에 위탁했던 것이라도 국가가 맡아 할 수 있지만, 지방하천의 관리·정비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전국의 지자체

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액수의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재정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지류 하천의 홍수까지 예방할 수 있다면 현 정권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장·차관들 공공기관 지방이전 독려해달라”

김총리 “농업 등 취약 분야 영향 분석 등 한·중 FTA 대비 필요”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한전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 “내년 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부처별로 소속 기관의 지방 이전에 관심을 갖고 독려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기관이 21곳, 설계에 착수하지 못한 기관이 9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전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15개 이전 대상 기관 중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 한국농수산대학 등 4개 기관이 부지매입과 청사 설계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김 총리는 “올해부터 다수 기관의 청사 착공 등 이전 본격화에 따라 이미 수립된 이전 추진 대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 과제의 조속한 완료와 장·차관의 소관 기관 착공식 행사 참석 등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전 사업이 내년 말까지 완료돼야 하지만 추진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나올 수 있다”며 “미리 일의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지원 사유 등이 공유되고 양해가 구해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가 내년 말까지 이전한다고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무게감을 인식하고 장·차관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중국이 적극 제기하고 있다”며 “농업 등 취약 분야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대응에 대해 세심하고 창의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현대캐피탈 고액정보 해킹 유출사건과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등과 관련, “관계 부처는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금융권 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해 취약점 보완 등 대비책을 마련하라”며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의 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본 원전 사태에 대해 “국민이 방사능 비, 먹거리 안전 등 정부 발표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부가 취한 조치를 재점검·보완하라”며 “농수축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철저히 살피달라”고 지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ybmjuniortest.co.kr
JET 초·중·고 영어시험 JET-S·W TOEIC Bridge YBM 초·중·고 학생 한자 인증시험
국가영어능력평가(NEAT)
“나는 JET로 준비한다.”
초등학생 영어 4대영역 평가의 표준
Listening · Reading · Speaking · Writing
JET(Junior English Test)
한국영어교육학회(KATE)인증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능력평가의 첫걸음
JET Speaking & Writing
한국영어교육학회(KATE)인증 초·중·고생을 위한 영어 말하기, 쓰기 시험
TOEIC Bridge
영어능력 초·중급자를 위한 국제공인 영어시험
YBM 한자인증시험
초·중·고생들의 기초 한자 능력과 교과과정 한자어휘의 활용능력 평가시험
문의 및 안내처 서울 YBM JET 사무국: 02) 2279-0505
광주 글로벌 교육: 062) 381-0515 / 목포 영지교육사: 061) 283-6801
순천 장운교재사: 061) 724-9820 / 여수 한려서점: 061) 652-0339
주관 및 시행 YBM

빛의만평 - 김중두
한결같은 정신으로 영원하라!